

3 치열하게 논쟁하자!



1) 쟁점 만들기

장애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보는 입장과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보자.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보기

사회적인 문제로 보기

- 2) 두 팀으로 입장을 갖고 각 팀의 입장대로 주장하고 상대방 팀을 설득해 보기로 하자.
- 3) 서로 팀을 바꾸어서도 진행해 보자.
- 4) 논쟁 후에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논쟁 전과 바뀐 것들이 있으면 다음에 적어 보자.



4 생각해 보기

- 1) 장애와 관련된 차별의 경험들을 자신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경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 2) 장애와 관련된 차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했음을 이해하고 만약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본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
- 3) 자신을 둘러싼 많은 억압과 차별들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낙담하거나 가족의 문제로 갈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함께 싸워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임을 다짐하기

우리를 억압하는 무기들...

학습목표

- 나를 억압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게 한다.
-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1 주제 이야기

장애인을 억압하는 무기가 있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물리적 장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들의 무기가 있다. 굳이 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억압들이 무기만큼이나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무기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였을까? 아니면 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 진 것일까? 물론,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라는 낙인으로 오는 사회적 선입견부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차별은 분명히 장애인을 배제하고 억압하고 있다.

최소한의 돈이라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경쟁과 효율이 극대화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 낙오자의 책임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이란 존재는 이 사회의 한 주체나 구성원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집단이 되어 버린 듯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



그러나 침묵만 하고 있다면, 인내만 하고 있다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러한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만 그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무기들을 찾아내고 무장 해제시켜야만 한다. 어떠한 무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또한 그 무기들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저항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2 생각을 드러내자!

1) 나를 억압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2)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왜 발생되어진다고 생각하는가?

3)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이 사회 속에서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3 치열하게 논쟁하자!



1) 쟁점 만들기

억압하는 것들을 모두 나열해 보고 비슷한 것끼리 서로 모아내 보자.

- 2) 분류한 다음, 어떠한 기준으로 모음을 분류했는지 이야기 하고 각 모음별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이야기 해 보자.
- 3) 분류된 각각의 모음별로 그러한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자.
- 4) 해결 방법에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 해 보자.



4 생각해 보기

- 1) 자신의 경험한 억압들을 다시 한 번 회상해 보고 그러한 억압들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기
- 2) 그러한 억압들로 인해 자신이 받은 영향과 그러한 억압들을 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장애인 차별은 다른 사회적 차별과 맞닿아 있다

학습목표

- 1) 차별이 일어나는 원인과 차별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한다.
- 2) 장애 차별과 다른 사회적 차별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



1 주제 이야기

장애 차별은 다른 사회적 차별과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차별의 속성이 강자가 약자에게,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저지르는 만행이기 때문이다. 그 차별의 속성은 단지 장애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빈민,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도 차별은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강하게 그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놓여 있는 억압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만 싸운다면 그것 또한 이기적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가진 자들의 탐욕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신이 억압받고 차별받는 아픔으로 다른 장애인의 억압과 차별을 이해하고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 영역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고통 받고 있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함께 연대하여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억압과 차별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억압과 차별도 소중히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가 똑같은 사회적 폭력으로 나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짓누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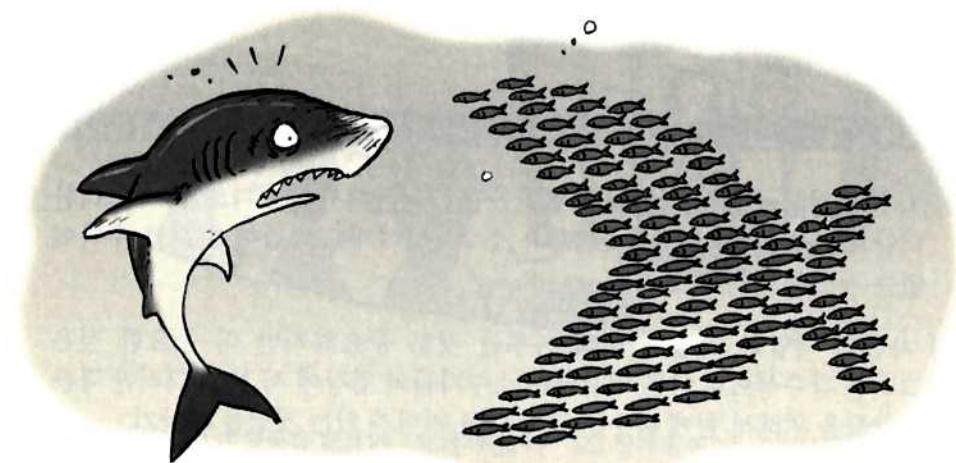
2 생각을 드러내자!



-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 2) 사회적 차별이 다른 소수자(예를 들면...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빈민 등)와 장애인들에게 발생하는 형태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상관없다 생각하는가?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 해보자.

- 3)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서로 함께 연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 해결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자.



3 치열하게 논쟁하자!



1) 쟁점 만들기

장애인 문제를 다른 사회적 차별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과 서로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보자.

장애인 문제는 다른 사회적 차별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장애인 문제는 다른 사회적 차별과 서로 상관이 없다.

2) 두 팀으로 입장을 갖고 각 팀의 입장대로 주장하고 상대방 팀을 설득해 보기로 하자.

3) 서로 팀을 바꾸어서도 진행해 보자.

4) 논쟁 후에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논쟁 전과 바뀐 것들이 있으면 다음에 적어 보자.

4 생각해 보기

1)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억압과 차별받았던 경험들에서도 생각해 보고 그러한 억압과 차별들이 다른 장애인들과 소수자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해 보기

2) 자신의 억압과 차별에 대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수성으로 다른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보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임을 깨닫기

사회가 요구하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거부하라!

학습목표

- 1) 사회 속에서 그려지는 장애인의 잘못된 이미지에 대해서 알게 한다.
- 2) 그러한 잘못된 이미지가 더욱 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그런 이미지를 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찾게 한다.



1 주제 이야기

“왜 드라마 속 장애인은 꼭 착해야 하나”

“대중 매체에 장애인이 등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슬픈 연가〉의 김희선처럼 수동적인 비운의 여성하거나 〈부모님 전상서〉의 자폐 아동처럼 가족간 불화의 원인이다. 좋은 평가를 받은 〈말아톤〉만 해도 가족들이 너무 불행하게 그려진다.”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프레시안〉과 '420 장애인의 날' 인터뷰를 하며 털어놨던 불만이다. 그는 “장애 여성들끼리 드라마를 보다보면 허점이 바로바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를테면 집안에만 ‘갇혀 있는’ 청순가련형 여성 장애인을 보면서 “쟤는 집도 부자면서 왜 전동휠체어를 안 쓸까?”라는 식이다.

그는 당시 “장애인의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로 ‘장애인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환영이지만 과장되거나 정형화된 캐릭터는 또 하나의 왜곡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권익연구소 설문조사 “드라마 속 장애인, 수동적이거나 인간승리이거나”



2 생각을 드러내자!

1) 사회 속에서 그려진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이야기 해 보자.

2) 그러한 이미지가 또한 어떠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지 이야기 해 보자.

3) 그럼, 그러한 잘못된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자.



3 치열하게 논쟁하자!

1) 쟁점 만들기

서로의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들과 차이가 나는 이야기들을 모아 보자.

공통적인 이야기

차이가 나는 이야기

2) 공통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갖고 토론해 보자로 하자.

가. 각자의 입장을 갖고 각자 주장하고 상대들을 설득도 해 보기로 하자.

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잠시 생각을 갖고 차이 나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하자.

다. 토론과정을 걸쳐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들을 다음에 적어 보자.



4 생각해 보기

1) 사회 속에서 그려진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와 편견들을 생각해 보고 자신 또한 그러한 이미지에 얹매여 있는지는 아닌지 생각해 보기

2) 그러한 이미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편견과 억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한 그러한 잘못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기

때로는 같고, 때로는 다르게...

학습목표

- 1)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은 NO)
- 2) 장애인 각자에 맞는 경험과 특성은 서로 다르고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차이는 존중)
- 3) 이러한 같음과 다름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존중되고 배려가 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한다.



1 주제 이야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이고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아마 장애인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 공감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에 낯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막상 만나보면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장애인들이 겪었던 삶의 경험과 장애로 인한 개인적 특성만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러한 것도 들여다보면 비장애인도 그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경험과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그 차이 이상으로 장애인을 낙인찍고 차별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장애인을 특별한 대상인 것처럼 언론에 의해 다뤄지고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장애인의 특성과 차이는 무시한 채 비장애인들의 기준대로 장애인들을 무능력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장애인들을 다른 인간으로 규정하면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고, 차이는 존중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차이를 무능력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아마 반대로 세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봉사의 대상이나 자기 위안의 존재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동등한 인격체인 것이다. 또한 반면에 장애로 인한 차이와 특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같은 것을 같음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실천할 때, 그러할 때만이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서로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2 생각을 드러내자!

- 1) 장애인에게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 2) 장애인에게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 3) 이 사회는 장애인에 있어서 똑같이 대해야 할 것은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대하여야 할 것은 똑같이 적용하면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 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자.

3 치열하게 논쟁하자!



1) 생점 만들기

장애인들에게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들과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들로 서로 나누어 보자.

같게 대해야 하는 것들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들

2) 공통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갖고 토론해 보기로 하자.

가. 각자의 입장을 갖고 각자 주장하고 상대들을 설득도 해 보기로 하자.

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잠시 생각을 갖고 차이 나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하자.

다. 토론과정을 걸쳐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들을 다음에 적어 보자.



4 생각해 보기

1) 이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같게 대해야 하지만 다르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2) 이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해야 하지만 같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3)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것은 같게 대해야 하는 것은 같게 대하고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 사이

불 지르기
일곱

학습목표

- 1)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사회 기득권층의 입장이 반영된 상대적인 것임을 알게 한다.
- 2)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해서 그 경우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자.



1 주제 이야기

“합법? 우리가 안 한 게 뭔가”

‘장애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얼마 전 남산에서 오세훈 시장이 축사를 하는 ‘사회복지인 남산걷기 대회’에서 기습 피켓팅을 벌였다. 장애인 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라며 2년 전부터 요청했던 면담을 해달라는 요구였다. 시장을 쫓아다녔더니 아랫선에서 이제야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 그전에는 그나마 이런 연락도 없었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냥 생색내기, 대충 때우기 수준의 면담이었다.”

그는 답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은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석암재단, 성람재단 등 비리가 드러난 복지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한달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 측과 장애인단체 사이에 제대로 된 면담이나 대화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농성장을 치우려는 직원과의 싸움과 강제 해산을 경고하는 계고장만 날아왔을 뿐이었다.

“정부는 자꾸 ‘합법’을 얘기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1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도 했다. 이를 서울시가 무시하거나 까 농성까지 들어간 거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다가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간 망신을 당하니까 연락이 온다.

관공서의 태도는 항상 그런 식이었던 같다. 종로구청, 양천구청, 서울시, 구두상, 서류로 요구하면 무시하다가 그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농성을 하면 오직 그 상황을 보면 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일을 유도한다고 생각한다."

"알면서도 놔두는 관료주의가 문제를 끌고 있다"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고질적인 문제다. 국내 최대의 복지재단 중 하나인 성남재단은 지난 2006년 1개 시설에서 27억 원의 횡령 혐의가 밝혀지는 등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관리감독을 맡았던 서울시는 성남재단으로부터 강원도 철원 지역 세 개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재단 측이 채납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석암재단 역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던 마찬가지다. 석암베네스다요양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석암재단은 지난해 3월 서울시 감사 결과 약 1억700만 원의 장애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재단을 설립했던 이부일 전 이사장은 지난달 6일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과 인척 관계인 제복만 현 이사장을 비롯해 시설장 2명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혹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껏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범인허가취소, 보조금 중단 등 '합법적' 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정작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남재단 문제는 8년 전인 2000년에 이미 서울시 안에서 보고가 됐다. 당시 서울시가 만든 자료에는 '성남재단에 인권유린과 국고보조금 횡령, 유용사태가 벌어지는 해

결되지 않는다'며 이를 시설에서 가까운 철원군이 감독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인지했으면서도 제스처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이는 태도다. 2~3년에 한번씩 자리가 바뀌다보니 자신이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최대한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넘어가길 바라는 거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순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발목 잡혀서 그 부서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태도로 이 상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관료주의가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본다."

"병 걸린 군인, 식중독 발생한 학교는 언론에 나와도 장애인은..."



2 생각을 드러내자!

1) 법적 기준에 따라서 사건과 상황들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사례들을 찾아보자.

2)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당연히 필요한 법인데 재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3)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일부의 경우일 뿐인지를 서로 이야기 해 보자.

3 치열하게 논쟁하자!



1) 쟁점 만들기

서로의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들과 차이가 나는 이야기들을 모아 보자.

공통적인 이야기

차이가 나는 이야기

2) 공통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갖고 토론해 보기로 하자.

가. 각자의 입장을 갖고 각자 주장하고 상대들을 설득도 해 보기로 하자.

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잠시 생각을 갖고 차이 나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하자.

다. 토론과정을 걸쳐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들을 다음에 적어 보자.



4 생각해 보기

1) 합법과 불법은 어떤 기준과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었다. 물론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역적과 공적이 수시로 바뀌는 역사적 실례는 차지하고서라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존재해 있다. 합법과 불법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면 그러한 이유가 미디어나 기존의 교육에 의한 반복된 경험들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자.

2) 법 재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 기득권층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정될 수 있음을 깨닫고 법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나 환상들을 버리고 하나의 도구와 수단일 뿐임을 생각해보자.

폭력이란 이름의 두 가지 잣대

학습목표

- 1)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폭력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한다.
- 2) 약자들에 행하는 폭력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진 자들의 엄청난 폭력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외면하는 사회적 논리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한다.



1 주제 이야기

이 세상에서 아마 공개적으로 폭력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주 극단적인 폭력들은 당연시 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하소연들은 오히려 폭력이란 이름으로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 바 폭력에도 두 가지 잣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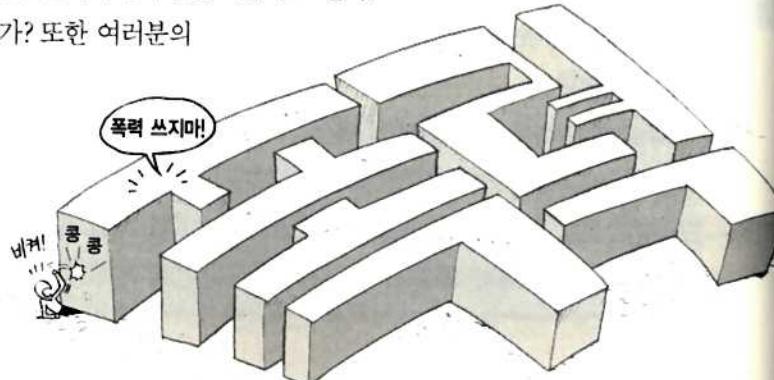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 무엇인가? 전쟁일 것이다. 하지만 전쟁에서 살인이란 영웅이란 이름으로, 민족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아름답게 치장된다. 실상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군인들보다 오히려 힘없는 여성들과 장애인들의 무차별한 죽음과 폭력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데 말이다.

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장애 아동의 어머님이 있다고 하자. 상급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보장받지 못해서 그 어머님이 교육청에 가서 항의할 수가 있다. 때로는 거기서 일정한 소란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관계자는 아주 정중하게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외형적인 폭력은 그 어머님이고 관련 관계자는 부드러울 수 있으나 어떠한 것이 더 폭력이란 말인가? 그 아동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엄청난 폭력이 존재하는데 말이다.

장애인 관련 집회에서 도로 점거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이나 일부 시민들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도로 점거, 어떤 기준에서는 폭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선택 없이 집에서만, 시설에서만 갇혀 지내게 만든 사회적 폭력은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교육받지 못하게 하는 폭력,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폭력,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폭력이란 이름으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잘못되었다고 한다.

왜 그 기준은 다른 것인가? 또한 여러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2 생각을 드러내자!

- 1) 사회에서 폭력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치려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2) 사회에서는 이야기 하지 않지만 내가 겪었던 폭력과 장애인들이 겪는 폭력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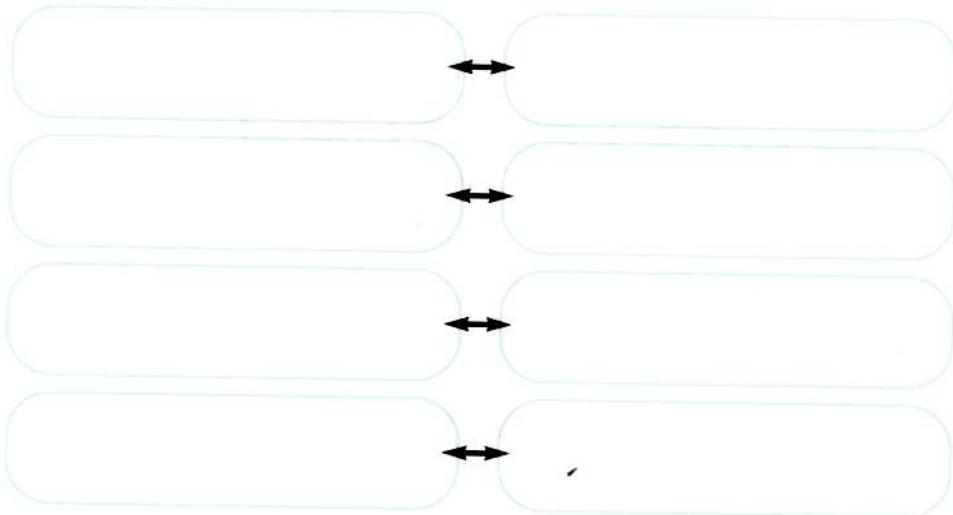
- 3) 기준들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고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도 또한 서로 이야기 해보자.

3 치열하게 논쟁하자!



1) 쟁점 만들기

사회 또는 정부가 바라보는 폭력과 우리가 바라보는 폭력 중에서 다른 경우들을 찾아보고 비슷한 속성끼리 서로 배치하여 보자.



- 2) 순서대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고 자신 팀의 입장대로 주장하고 상대방 팀을 설득해 보기로 하자.
- 3) 서로 팀을 바꾸어서도 진행해 보자.
- 4) 논쟁 후에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논쟁 전과 바뀐 것들이 있으면 다음에 적어 보자.



4 생각해 보기

- 1) 사회의 기준으로만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다고 토론 후에 새롭게 발견하게 된 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 2) 사회적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 관계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입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회적 약자의 저항도 폭력이란 울타리 안에서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적 권리임을 생각해 보기

장애인권관련 읽기 자료

하나. 장애의 사회적 이해와 장애인권

둘. 한국 장애인 운동의 역사

셋. 장애인야학 운동의 기본적 정체성과 방향



장애의 사회적 이해와 장애인권

김 도 현 (노들장애인야학 운영위원)

1.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해결방법도 달라진다.

이진경의 책 『철학과 글뚝 청소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 집 대문 앞에 아무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주차해 놓은 자동차 때문에 불편을 겪다가 화가 나서 그 자동차의 바퀴에 펑크를 내 버렸고, 이로 인해 자동차의 주인과 싸움이 발생한 것이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즉 어떻게 문제를 설정할 것인가?

첫째, 왜 나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에 펑크를 냈나? 자동차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남의 차가 우리 집 앞에 세워져 고생을 했으니 화가 나서 그랬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의 해결은 심리 치료를 받거나 수련을 쌓아서 나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심리적 문제설정→심리적 해결).

둘째, 불법 주차한 자동차에 펑크를 낸 행위가 불법인가, 아니면 적법인가라는 문제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의 해결 역시 법정에서 나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으면 그걸로 해결될 수 있다(법적인 문제설정→법적인 해결).

셋째, 왜 그 사람은 주차장이 아닌 나의 집 앞에 불편하게 주차를 해 두었나? 그건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도시 교통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의 해결은 도시 교통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사회적 문제설정→사회 정책적 해결).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의 방식도 달라진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동정, 봉사, 극복 :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3가지 시각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일까? 결국 장애문제의 해결도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터인데 말이다. 이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우리 시대의 유력한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는 TV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을 들여다보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매체들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묶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통해 시혜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둘째, 그러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삽박하지만 아직은 인간미가 살아 있는 살만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들. 셋째, 그러한 봉사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의 영웅담.

결국 이러한 시혜와 동정, 봉사, 극복이라는 3가지 키워드와 이미지가 우리 사회가 장애(인)를 바라보는 주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강화시킨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장애에 대해 갖는 인식은 결코 그 자신의 선의와 악의에 의해, 명석함과 어리석음에 의해, 즉 그 자신의 임의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매우 많은 것을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사회적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여지도 없는, 감성적이며 본능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미(美)의 기준 까지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주장이 조금 더 쉽게 납득이 될 것이다.

혹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TV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는 목이 길면 긴 여성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그 부족의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쇠로 된 고리를 최대한 많이 목에 감아서 목을 늘린다.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지만, 적어도 그 부족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다고 느낀다. 서태평양의 어떤 섬나라에서는 뚱뚱한 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된다. 또한 중세 시대 중국의 한족(漢族)은 발이 작은 여성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전족(纏足)이라는 풍습을 지녔다. 어린 여자 아이의 발을 천으로 동여매고, 발에 꽉 끼는 작은 신발을 신도록 하여 발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미의 기준에 대한 역사성과 사회성을 잘 보여주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의 경제적·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에서 목이 긴 여성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냥이 주된 경제활동인 것과 연관된다. 즉 영양, 얼룩말, 타조, 기린 등 사냥의 대상이 되는 온순한 동물은 목이 길며, 사냥을 하는 주체인 사자, 하이에나, 표범은 목이 짧다. 이러한 이미지가 전이되어 목이 긴 것이 여성성의 상징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각인되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뚱뚱한 것이 미의 기준인 서태평양의 섬나라에서는 해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모든 것을 쓸어 가버리는 해일이 한번 발생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섬나라에서는 일차적으로 생존 능력이 강하여 종족을 번식 시킬 수 있는 여성 이, 즉 뚱뚱한 여성의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장애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시각 역시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진다. 나중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 좀 거칠게 단순화 시켜 이야기 하자면, 장애에 대한 인식 역시 기본적으로 현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특정한 종류의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기능적 필요)와 중심적 가치들(경쟁과 효율성, 개인주의)에 의해 구조화되고, 이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의해 장애가 어떻게 투영되어지는가에 달려 있으며,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역시 그러한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2.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장애에 대한 주류 사회의 의학적 정의 : 손상이 곧 장애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주류적인 장애의 정의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손상(impairment), 기능제약/불능(disability), 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라는 삼단계의 구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 가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 장애라고도 번역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영어식 표현은 The impaired, The disabled, The handicapped 가 모두 가능하고, 실제로 쓰이고 있다. 사실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그 단어에 부여된 본래의 의미가 온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사회적인 맥락도 모두 제거되어 버리고 만다. 또한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미권에서도 장애와 관련해 impairment와 disability의 의미 자체가 다양하게 규정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임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라고 옮겨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어쨌든 WHO는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 국제질병분류 기준)를 근간으로 1980년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국제장애분류기준)를 제시하게 된다. 이를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ICIDH에 의한 장애의 개념>

건강 조건 (health condition)	손상 (impairment)	기능제약 (disability)	사회적 불리 (handicap)
병리학적인 변화로 서의 증상이 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정상성'이 발생했다.	임상적인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반 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을 인식하였다	활동상의 능력 제한이 발생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감소되었다.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 제한에 대하여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발생했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신체적 차원 (body level)	개인적 차원 (person level)	사회적 차원 (society level)

이러한 ICIDH는 이후 사회적인 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하여 1997년 ICIDH-2로 그리고 2001년에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로 변화?발전되었다. ICIDH-2는 용어를 긍정적 표현으로 변경하고(기능적 제약→활동, 사회적 불리→참여)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을 추가하였으며, ICF는 ICIDH-2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용어를 다시 한 번 수정하고(손상→신체 기능과 구조) 상황적 요인과의 역동성을 보다 강조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헷갈리고 머리만 아프게 했지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주류적 정의에 있어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장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이다. 손상(impairment)→기능제약(disability)→사회적 불리(handicap)라는 삼단계 도식에서 장애의 본질과 원

인은 결국 개인의 몸이 지니고 있는 손상에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문제의 해결 역시 이러한 손상을 잘 치료하거나, 치료하다가 안 되면 재활을 통해 소위 잔존 능력을 강화시켜 이루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의 주류적 설명을 장애의 의료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 혹은 재활모델이라고 부른다. 주요 각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이를 보면 모두 WHO의 도식과 장애의 의료모델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장애인복지법, 1999)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일본(장애인기본법, 1993) :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음으로써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 미국(ADA, 1990) :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 영국(DDA, 1992) :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 독일(장애인평등에관한법, 2000) :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의 전형적 상태와 상당히 다르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자

이에 반하여, 한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오랫동안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지난 2005년 9월 20일 입법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체에관한법률'은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장애)

① "장애" 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자체는 앞의 의학적 정의와 엇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인하여' 앞에 무엇이 위치해 있는가, 즉 장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정의가 도출되는 관점과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장애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적 정의

: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손상은 장애가 된다.

장애란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라는 것은 많은 장애 운동 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주장되어 왔다. 영국의 '분리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 연합' (UPIAS : the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이 제시했던 장애에 대한 아래의 정의는 이러한 시각을 가장 간명하고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손상(impairment)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장애(disability)는 사회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신체

적 손상에 덧붙여 부과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집단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손상과 장애라고 불리는 '사회적 상태'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상(Impairment)을 사지의 일부나 전부가 부재한 것, 또는 신체의 일부나 그 기능의 불완전한 상태로서 정의한다. 그리고 장애(Disability)는 육체적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현재의 사회조직이 불완전하거나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불리와 활동의 제약이며, 그것으로 인해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주류적 정의가 자신이 지닌 한계와 비판을 무마하고 가리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도식을 동원해 장애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위의 정의는 손상과 장애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장애의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어 주고 있다. 즉 하나의 인간학적 속성 내지는 특질(trait)인 손상(impairment)이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장애(disability)라는 상태(state)로 만들어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손상(impairment)→[노동력의 상품화, 경쟁과 효율, 개인주의, 물리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차별]→장애(disability)의 도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얼른 확 다가오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예를 통해 설명을 해보자. 서구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이에 따른 식민 활동이 전개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은 19세기 후반까지도 노예로 존재해야만 했다. 즉 그 시대에 흑인은 곧 노예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인가? 노예가 된 원인이 검은 피부색 때문이었는가? 그들은 여전히 피부가 검은 흑인인데 왜 노예가 아님지? 장애의 원인을 육체적 손상에서 찾는 것은 노예가 된 원인을 검은 피부색에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흑인은 흑인일 뿐이데,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환경 속에서 노예로 존재했다. 동성애는 동성애일 뿐이데,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신질환으로 취급받았다. 비만은 비만일 뿐이데, 현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질병으로 규정된다. 마찬가지로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손상(impairment)은 장애(disability)가 된다! 이는 성(性)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학적 속성으로서의 섹스(Sex)와 사회적인 성별로서의 젠더(Gender) 개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라 그로스(Nora E. Groce)라는 사회학자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 해안가의 외딴 섬인 마서즈 비니 어드(Martha's Vineyard)에서 농인(deaf people)들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섬에서 농인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만의 농 문화를 형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섬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와 수화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바이링귀스트(bilingualist)들의 사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농인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농인들은 지역사회와 삶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예는 우리의 사회 내에서 어떻게 '농deaf'이라는 하나의 객관적 특질이 청각 '장애'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인들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농인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들은 장애인이 된다. 이것이 억지처럼 들릴지 모른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지 않는 언어마저도 매우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서양의 경우에는 라틴어를, 우리는 한자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운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 최근의 국가 교육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왜 모든 국민들은 어떤 기준과 필요에 의해 영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수화는 배우지 않는가? 영어는 소위 세계화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수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화를 또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고, 농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특수한 방법으로서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농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인간이 지닌 다양한 차이들 : 누가 누구를 정의하고 규정하는가.

장애인, 비장애인의 몸을 기준으로 한 임의적 범주

페미니스트 정희진이 자신의 책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적절하게 비유했듯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세계에서는 정의하는 자와 정의당하는 자가 존재한다. 극동아시아라는 표현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번성했던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규정된 명칭이다. 아마도 20세기 들어 경도가 그어졌다면 미국 워싱턴쯤을 기준으로 했을 테니, 우리나라를 극서아시아 지방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대륙이라는 표현도 유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며, 한국의 남해라는 표현도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해가 된다. 유색인종이라는 표현 역시 백인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인종을 깡그리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버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라고 규정한 범주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차이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장애인 내부의 차이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보다도 크다. 청각장애인,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3명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자. 비장애인은 시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고, 비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지만,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은 소통이 매우 어렵다. 목발이용 장애인, 비장애인, 전동휠체어이용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몸 자체가 지니는 차이는 목발(전동휠체어)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보다 목발이용 '장애인'과 전동휠체어이용 '장애인'이 훨씬 클 수도 있다. 에스컬레이터는 목발이용장애인과 비장애인에 편의시설될 수 있지만 전동휠체어이용 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비장애인의 몸을 기준(표준)으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인간을 분류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정희진의 말을 빌리자면, 장애인이 가진 다양한 차이들, 인간이 지닌 다중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정체성을 장애인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차별주의이다. 하나님의 개인으로서 한 인간을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와 그녀가 지닌 여러 가지 정체성 중 장애라는 것으로 한 사람의 전부가 빨려 들어가는 것. 다양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장애인인니까 그렇지.", "장애인이 그 걸 할 수 있겠어."와 같은 표현들이 그렇다. 또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구분은 물론, 요즘은 아동용 소변기와 대변기까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부지기수지만, 그나마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녀구분이 안된 곳이 대부분이다. 그와 그녀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차이와 정체성은 모두 사라지고,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오로지 '장애인'으로서만 남는 것이다.

장애인을 둘러싼 명칭과 그 함의들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까지는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았으며, 불구자(不具者)나 폐질자(廢疾者)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폐질이라는 단어는 고질(痼疾)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고칠 수 없는 병'을 뜻하며, '몸에 남아 있는 병'이라는 의미의 잔질(殘疾)과 함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부터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현에 등장한다. 잔질인은 현대에도 중국에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법이다. 이러한 용어법은 장애를 질병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의료적 관점에 굳게 기초해 있지만, 그 의미상 더 이상의 치료나 재활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근대의 장애 개념보다 나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1981년에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障礙)'라는 표현이 공식화 되는데, 이 장애라는 표현은 영어의 디스어빌리티(disability)를 일본에서 사용하는 장해자(障礙者)라는 한자 표기의 영향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이후 1989년에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 장애인 단체가 '장애우(障礙友)'라는 표현을 단체 명칭과 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통해 사용하면서, 이 용어 역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방송계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가장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가라는 한 설문조사에서, 장애우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고 하니 그 영향력도 만만치가 않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하고 있고, 이를 공식용어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단체를 상대로 물어볼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 용어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지적되고 또 비판되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장애우라는 표현,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라는 의미 구조 안에서,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은 장애인이고 우리는 비장애인이다. 즉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것이다. 친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우(友)'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2, 3인칭의 표현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장애인이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나타내는 1인칭의 표현일 수는 없다. "나는 장애우입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나이주의와 권위주의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연령과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모든 장애인이 나와 친구일 수는 없다. 역설적으로 나이주의가 매우 공고한 한국 사회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이 부분별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비장애인과의 관계에 있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치적 비판의 지점이 수반되지 않은 막연한 완곡어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라는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 핵심과 무관하거나 이를 비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우라는 표현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장애인 단체에서 Differently abled people(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라는 영어식 완곡어법 역시 앞서 도입하여 단체의 영문 표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결코 무관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법 이외에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장애인과 대비하여 장애를 지니고 있지 않은 집단을 어떻게 지칭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일관되게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무의식중에 더 많이 사용하곤 한다. 정상인이라는 용어의 대칭어는 비정상인이다. 곧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말이 되어버리고 만다. 일반인이라는 용어 역시 그 반대편에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기이한 사람, 일탈자를 상정하고 있다. 즉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려는 배타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경계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된 용어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정상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인이란 ①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 ②어떤 일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를 '특별한 지위나 신분'이라고 우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장애인이 '어떤 일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억지로 찾을 요량이 아니라면, 일반인 역시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일 수 없다는 얘기다.

사회 통합, 누가 누구에게로 통합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구획과 규정들, 그리고 이름 짓ing에 대한 비판에 있어 그 핵심은 결국 그러한 행위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되고 싶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장애문제의 해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향과 관련된다.

장애 문제 해결의 대원칙처럼 얘기되고 있으며, 누구도 별 이의를 달지 않는 방향성은 아마도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의 실현이 아닐까 싶다.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철저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기에 그 역방향으로의 진전인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가져왔던 문제의식을 조금 더 날카롭게 벼려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회 통합이 어떠한 조건에서 누가 누구에게로 통합됨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류화(mainstreaming)라는 개념, 그리고 여기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이념은 결국 비주류인 장애인이 주류인 비장애인의 사회에, 비정상인 장애인이 정상적인 비장애인의 삶의 양식에 맞추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통합은 장애인에게 또 다른 고통과 딜레마를 안겨 줄 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장애인 주체의 노력 속에서 일부의 장애인은 '정상화'되어 비장애인의 삶과 함께 흘러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의 장애인은 여전히 그 외부에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잘 해야 장애인 대중 전체에 대한 새로운 분할과 이에 기반을 둔 더욱 공고한 배제가 만들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이라는 구호 속에서 여성은 남성이 차지했던 세계로 편입되고 있지만, 남성도 여성의 머물렀던 공간으로 함께 진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공사(公私) 분리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성적 분업 구조 속에서 기존의 성 역할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슈퍼 우먼'이 되기를 강요받아왔던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 역시 장애인의 몸이 지닌 차이와 경험을 고려한 속에서 비장애인의 세계와 장애인의 세계의 상호 통합의 과정이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정의와 관념,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라는 속도의 문화는 전면적인 혁신과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비장애인의 지금까지 건설해온 문명 중 장애인에게 가장 적대적인 문명의 하나임에 틀림없는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거쳐 가야만 할 것이다.

1960~1970년대 일본의 급진적 장애인 운동에서 핵심을 형성했던 푸른잔디회(?)라는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의 「행동 강령」 중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들은 비장애인의 문명을 부정한다"이다. 근본주의와 분리주의에 기반한 극단적 입장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이러한 강령은 앞의 설명과 결합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결코 극단적이지 않다. 극소수의 국지적인 사례를 논외로 한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은 비장애인 중심의 문명이었다. 즉 이러한 강령은 자본주의 문명이 비장애인 중심의 문명 중 마지막이 되어야함을, 새롭게 건설될 세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건설해나가는 문명이 되어야 함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 장애인권의 가치와 의미

질문을 하나 던져 보도록 하자. 장애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맞나 틀리나?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맞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동권의 문제를 얘기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단지 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든지, 전체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근본적인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근거가 '보험'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가 부추기고 강화하는 이기심에 부박하게 편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논리로 우리 모두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여성의 될 가능성 없는 남성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이성애자는 성적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흑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백인 역시 인종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또는 장애운동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장애인을 둘러싼 다양한 차별과 억압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에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장애문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또한 여성의 문제가 여성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를 매개로 한 여성-남성 간의 관계의 문제이며, 노동의 문제가 노동자 일방의 문제가 아닌 노동력의 상품화를 매개로 한 노동자-자본가간의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장애의 문제는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매개로 한 '장애인-비장애인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마르타 라셀은 마치 석탄 탄광 속으로 풀려난 카나리아가 공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산소가 충분히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해 내는 것처럼, 장애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우리 사회의 진보에 대한 척도 (barometer)일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는 진정 그러한데, 왜냐하면 장애인의 인권을 쟁취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파괴적인 자기 논리를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빈곤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고 하고, IMF 이후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대다수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모두들 한 목소리를 내며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위 80:20의 사회가 형성되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월드컵 경기 때 그토록 목 놓아 불렀던 '대한' 민국' 이 하나의 윤태리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어려울수록 나눠 쓸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 아닌가? 나는 우리 사회가 운영됨에 있어 기본 원칙인 경쟁과 효율성, 그리고 적자생존의 논리가 결국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있어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확장시켜 나가는 활동은 바로 이러한 경쟁 및 효율성의 원칙과 대척점에서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투쟁은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사회의 논리와 가치를 바꾸어 나가는 활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즉 평등과 유대, 공동체성의 논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지 장애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은 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장애인 운동의 역사

김 도 현 (노들장애인야학 운영위원)

I.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시작(1987년 이전)

1. 실질적인 장애인 운동이 없었던 1960~1970년대

- '불구자' 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장애인을 불구자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때 '불구자'는 보호의 대상이거나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로 취급되었다. 1967년에 「한국일보」가 캠페인을 벌이면서 내건 구호, "성한 사람이 돌보자, 소아마비 어린이"는 이러한 사회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의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1954년 한국불구자복지협회로 출발, 1968년 한국신체장애인재활협회로 개칭)로 대표되는 장애인을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재활 전문가 집단이 주도를 하고 있었다.

- 장애인에 대한 입학 거부와 개별적 구제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건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7년에 부산중학교에 지원한 소아마비 장애인 윤철이 학과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체능검사 때문에 불합격된 사건, 1977년에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현 디자인학부)에 지원한 청각 장애인 박창권과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에 지원한 정길석과 구본영 등 여섯 명이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입학 거부 사태들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개인이 구제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1970년대 말까지 한국에 개인으로서의 '불구자'는 존재했지만 사회 현상으로서의 '장애'와 사회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신의 문제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그때까지 장애인들의 대응은 다른 사회 운동과 협력하거나 장애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려 하는 사회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사안을 해결하려는 캠페인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2. 대중적 장애인 운동의 맹아가 형성된 1980년대

- 김순석의 죽음과 청년 장애인들의 저항

1984년 9월 19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순석(지체장애1급, 당시 34세)이 도로의 턱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록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일군의 대학생들이 사회적 저항을 조직하게 된다. 1984년 10월 6일 있었던 제8회 전국지체부자유학생체전 개회식에서,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학정립단 등 청년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김순석의 모의 관을 메고 정립회관으로 들어와 장례식을 치렀고, 기습적으로 내빈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단상에까지 올라가 장관에게 문상을 요구하였며, 결국 개회식 행사는 파행적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김순석의 죽음은 장애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항거로서 평가된다. 또한 대학정립단을 중심으로 한 청년 학생들의 '장례식 투쟁'도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출현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은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시기였다. 유엔(UN)은 1976년에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1980년 5월에 광주 민중 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복지 국가 구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4월 20일이 한국에서 제1회 '심신장애인의 날'로 정해졌고, 6월에는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1년 9월에 서울이 1988년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88 서울장애인올림픽'도 함께 열리게 되어, 한국 정부는 국제적 시선을 의식하여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장애 문제에 대한 위와 같은 국제적 관심과 국내의 상황 변화 속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특히 1986년에는 한국DPI,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문제연구회 올림터 등이 결성되었다. 한국DPI는 소수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출범하긴 하였으나, 국제적인 장애인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0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한국농아복지회(현 한국농아인협회) 및 1981년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더불어 유형별 장애인 자조 조직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정립회관 내 고등부 모임인 '밀알' 출신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장애인문제연구회 올림터는 장애 문제를 제도 내의 문제를 넘어 변혁 운동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최초의 조직으로 평가된다.

II. 청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태동 (1987년~1993년)

1. 장애인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 투쟁'

- 장애자올림픽 거부 투쟁과 함께 펼쳐진 '양대 법안 투쟁'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이루어진 그 해 12월의 대통령 직접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계는 각 정당정책위원회 의장 등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및 심신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서울올림픽과 제8회 장애자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이 되면서, '양대 법안 투쟁'은 '장애인올림픽 거부 투쟁'과 맞물려 본격화 된다. 그 신호탄은 순복음교회에서 거둔 부활절 예배 현금을 장애자올림픽 지원금으로 기부하려 하자, 그 기만성을 주장하며 송인학 등 보람의 집 장애인 20여명이 종로의 연동교회를 점거하고 진행한 단식농성이었다.

이후 올림터,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 등 수도권 지역의 청년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경기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라는 연대 기구를 구성하고, 4월 16일에는 양대 법안과 관련된 최초의 대중 집회인 '장애인권익촉진 범국민결의대회'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장애자올림픽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양대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삼육재활원 점거 농성(4월 17일~5월 1일), '기만적인 장애자올림픽 폭로 및 장애인 인권쟁취 결의대회' (10월 9일), 명동성당 노상 단식농성(장애인올림픽 개최기간인 10월 15일~10월 24일)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청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대중 투쟁 이외에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던 장애인들과 명망가들이 주축이 되어 1988년 8월 11일에는 한국장애인총연맹(공동 대표 김성재 외 5인)이 결성되어 활동을 벌이게 된다.

- 본격적인 투쟁과 법안의 통과

장애인올림픽이 끝나고 1988년 12월 6일에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된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네 당의 법안이 모두 발표되었다. 장애인계는 정책운동을 표방하고 있던 애우권익문제연구소(1987년 12월 설립)를 중심으로 법안이 논의되어 1989년 8월경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촉진법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두 법안과 관련된 투쟁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심신장애인복지법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양대법안공대위)'가 결성되었다.

양대법안공대위의 구성 직후인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양대 법안 투쟁'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 야당 당사 세 곳에 대한 순회 점거 농성이 전지대련 소속 회원 30여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농성은 각 정당을 압박하여 장애인계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 통과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네 개 정당과 대통령 산하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정부, 장애인계 등 모두 일곱 곳에서 법안을 상정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양대법안공대위와 노동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절충 이후 12월 16일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심신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는 1990년 8월 23일에 있었다. 노동부의 안에 따르면 의무 고용 대상은 상시 고용 인원 100인 이상의 사업장, 의무 고용률은 2%였다. 그러자 법률을 제정할 때 입장

표명이 없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경총)는 1990년 9월 4일에 '장애인 고용관련 전문가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의무 고용 대상 업체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로 하고 그 비율을 1%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양대법안공대위를 구성했던 주요 단체들은 다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12월 8일에는 명동에서 '장애인노동권리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며 투쟁을 재개하였다. 결국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로 유지되었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업체의 상시 종업원 수는 30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변혁적 청년 장애인 운동 세력의 독자적 정립

88서울장애인올림픽이라는 구체적 계기 속에서 장애 민중의 가장 절박한 문제였던 생존권 및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양대 법안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장애인 운동의 시작으로 이야기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장애인 관련 문제들이 대부분 개인적 청원이나 호소의 형식으로 구제되는 방식을 취해 왔던 반면, '양대 법안 투쟁'은 장애 문제의 사회 구조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투쟁이었다.

또한 '양대 법안 투쟁'은 청년 변혁 운동 세력의 선도적 투쟁과 장애 민중의 대중적 역량이 만난 최초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양대 법안 투쟁'은 실질적인 법안의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결과 이상으로 장애인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애 문제의 해결을 한국 사회 전체의 변혁과 연관시켜 생각해 오던 청년 장애인 운동 세력은 이 투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대중적 공간 속에서 조직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대위 전체를 이끌어 나갔던 상층부가 투쟁의 성과를 대중 운동의 강화로 이어가려는 지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이 투쟁을 통해 결집되었던 역량은 이후에 흩어져버리고 만다. 울림터의 청년 장애인들은 1989년 11월 중순 경 양대법안공대위와 별도로 공화당사 점거 단식 농성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양대법안공대위의 상층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실질적인 하향 조정에 합의해 버린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청년 장애인 운동 세력 역시 전반적인 장애인 대중들과의 접촉 면을 넓혀내지 못한 채, 이후 일정한 고립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투쟁과 대응

- 시설 민주화 투쟁의 전초전, 싹틈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농성

'양대 법안 투쟁' 이후 장애인 운동은 중심 의제를 상실하고 조직별로 재정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투쟁의 흐름을 이어 나갔던 것은 장애인 시설 비리에 맞선 투쟁이나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대응 활동이었다.

1989년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 훈련생들이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과 장애인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다. 복지관 직업훈련부를 수료한 사람들의 동문회로 1986년에 12월에 창립된 싹틈이 이 농성을 주도했는데, 싹틈은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김경태(싹틈 2대 회장), 박홍수 열사(3대 회장), 정태수 열사,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연대회의 공동 대표 박경석(8대 회장) 등 많은 장애인 운동가들이 속했던 모임이다.

-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인 정립회관의 비리와 두 차례의 점거농성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미쳤던 '시설 비리 투쟁'은 1990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정립회관 점거 농성이었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정립회관은 1975년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 시설이었고, 회관의 관장이었으며 그 자신이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황연대는 장애인계의 '대모'(大母)라 불릴 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1990년 농성은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건설준비위원회(약칭 서정청련(건))를 중심으로 6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45일간 진행되었는데, 관장의 퇴진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십 수 년 동안 지속되던 정립회관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외부 감사 실시와 정발특위를 통한 민주적 운영의 실험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993년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38일 동안 정립회관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2차 점거 농성이 펼쳐졌을 때에는 회관 직원들, 이용자 모임, 장애인단체들이 '정립회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함께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이사장 퇴진과 관장 교체, 정립회관수습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정립회관 비리 관련 투쟁은 내부의 민주적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같은 진전된 제도 개혁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정립회관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관장의 불법적인 정년 연장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립회관은 2004년 또 다시 장기간의 농성 사태를 겪게 된다.

- 천안인애학교공대위의 활동

양대 법안 투쟁 후인 1991년에는 공립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 건립을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해당 군청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 학부모 단체들은 '천안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천안인애학교공대위)를 구성하여 청와대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공청회와 대중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지 승인을 받아내었다. 천안인애학교공대위는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된 '장애인복지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장애인복지공대위)'라는 장애인 운동의 현대기구로 이어지게 된다.

3. 장애인 교육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투쟁

-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법으로

천안인애학교공대위의 성과를 이어받아 구성된 '장애인복지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장애인복지공대위)'는 1992년부터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약칭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당시 일반 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의무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특수교육에서 중요한 조기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육의 기본 원칙인 통합 교육, 개별화 교육도 법안에는 그 개념조차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의 요구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 아동의 교육권 박탈을 용인하는 악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장애 아동에 대한 완전한 의무 교육의 시행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의 쟁취, 그 성과와 한계

장애인복지공대위는 장애인의 의무 교육 보장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법안을 1993년 1월 8일에 최

종 확정하고, 그해 4월에는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장애인교육권법대위)'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결실을 거두어 1993년 12월 17일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데 반해 전면 개정된 법안은 5개 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장애인 교육도 일반 교육 과정에 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였고, 장애인 교육에서 기본 원칙인 통합 교육과 개별화 교육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현장의 특수교사나 학부모 등 특수교육의 실질적 주체들을 투쟁의 과정에서 조직해나가는 대중 운동의 지향을 지니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과 한계로 남는다. 이 시기의 투쟁을 통해서도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대중 운동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같은 후속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진일보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현실에서는 큰 변화를 일구어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3년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구성될 때까지 10여 년간 장애인 교육권 운동은 공백기를 갖게 된다.

4. 울림터와 장애인운동 청년연합회에 대하여

- 변혁적 장애인 운동의 문을 연 울림터와 전지대련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의 장애인 운동이 질적인 도약을 보여 주었던 데에는 변혁적인 정치적 입장으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했던 청년 장애인 운동의 등장과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의 창립으로부터 그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울림터는 1986년 9월 14일에 여성백인회관에서 대학생과 청년 활동가 10여명이 모여 창립하게 된다. 창립 멤버들의 다수는 정립회관의 고등부 모임인 '밀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학생 운동 조직들의 사상적 지향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울림터는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약칭 전지대련)과 함께 양대 법안 투쟁의 주요한 계기마다 그 중심에서 현장 투쟁을 이끌며 치열한 활동을 펼쳤지만, 1990년부터는 활동이 정체되며 쇠퇴의 길을 걸었다. 양대 법안 투쟁 이후 뚜렷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중 투쟁 사업이 약화된 것이 한 요인이었다. 또한 1990년 2월에 서장청련(건)이 구성되어 다수의 활동가가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집행 역량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울림터는 울림터해체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활동을 기록한 책자를 발간하고, 1993년 3월 7일에 '울림터는 이제 물러갑니다'라는 행사를 열고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 장청의 출범과 전국적 청년 조직 건설을 위한 노력

장애인 운동을 변혁 운동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며 활동했던 울림터의 활동가들은 1988년과 1989년의 '양대 법안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적인 청년 단일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양대 법안 투쟁 당시 서울경기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청년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연대 기구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설 조직으로서의 결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었으며 수도권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울림터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청년 활동 가들은 1990년 2월에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건설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약 1년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1년 4월 13일에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약칭 장청)를 정식 출범시켰다.

장청은 전지대련 활동으로 형성된 인맥을 중심으로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약칭 전청) 건설을 제

안하고 1991년 11월 3일에 전청 주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결국 본조직의 건설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 독자적인 조직으로서의 대중적?물적 토대에 한계를 느낀 장청은 1993년부터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와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전장협은 여수 애향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립한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1982년에 창립한 '밀알들'이라는 단체를 전신으로 1991년 1월에 결성된 단체이다. 장청과 전장협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통합 수련회를 열고 황광식을 초대 회장으로 하는 통합 조직을 출범시켰다. 변혁적 청년 장애인 운동의 전국적 단일 조직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3여 년간 활동했던 장청은 자체적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전장협이라는 대중적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을 새롭게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 울림터의 해체와 전청 건설의 실패에 대한 평가

먼저 울림터가 해산되는 과정은 전국적인 청년 단일 조직의 결성이라는 당위와 목표 아래 장청이 건설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중 운동 세력과 장애인 운동 전반의 침체라는 불리한 외부 환경을 논외로 한다면 울림터의 해체에는 대다수 활동가가 장청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울림터 자체는 대학생이 아닌 회원도 포함하고는 있었으나, 전지대련이라는 틀은 대학생 동아리로서의 이미지와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결국 울림터의 활동가들이 주도하여 장청을 건설하였다는 것은 스스로의 활동 공간을 대학 사회 중심에서 사회 운동 영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독자적인 대학생 동아리로서 울림터를 유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왜 수반되지 못했는가인데, 이는 학생 대중 공간인 전지대련이 약화되고 있고 동시에 더 넓은 사회 운동 공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울림터를 주도하던 주체들의 선택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장청이 건설된 후 장청과 전청주비위의 활동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청주비위원회는 현장 대중 투쟁을 벌여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전청을 건설하고자 했던 주체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은 존재하였으나, 당시 장애인계는 적절한 의제를 창출해내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장청과 전청주비위에게 독자적으로 이를 생성해 낼만한 역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최민이 주도한 장애인인권사업기획단의 등장과 핵심 활동가들의 동요는 장청의 활동을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하면서 치명적 공백을 가져왔고, 전청 주비위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말았다.

한편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전장협과의 통합 결정은 당시 전체 운동의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고 있던 시민운동 내지 전문가 운동으로의 편입이 아닌 대중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재도약의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좌절 (1994년 ~ 2000년)

1.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저지 투쟁과 노동권 확보 투쟁

- 재계 및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시도와 전장협의 대응

장애인 단체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로 1989년 말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후에도 재계는 끊임없이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려 하였다. 1990년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1%로 낮추고자 시도했던 재계는 1994년 6월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상공자원부(현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협의하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하향 조정을 막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7일에 국회와 민주자유당을 방문하여 항의 집회를 갖고 회원 다섯 명이 야당인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투쟁으로 의무 고용률은 2%로 유지되었지만, 기업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에 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연계 고용제'가 1995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포함되어 2006년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날로 자리 잡은 장애인의 날

전장협은 이렇게 1994년의 투쟁을 그 중심에서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울림터와 장청을 거쳐 왔던 전장협의 많은 활동가들이 장애의 문제 역시 자본주의의 모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열악한 장애인의 고용 현실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1995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장협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준비위원회(약칭 민주노총(준)), 산재노동자협회와 함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자?장애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준)은 소속 1천 2백여 사업장들의 단체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 대회는 장애인 운동과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가 시작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이후에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노동권 확보 투쟁이 집중되는 계기로 자리를 잡았다. 1996년에는 전장협의 지부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14박 15일간의 전국순회 투쟁으로 '장애인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결기대회'가 치러졌으며, 1997년에도 전장협의 주관 하에 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요구하는 행사를 치르고 결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한동안 잠잠하던 재계의 장애인고용촉진법 무력화 시도는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3월 30일에 전국경제인연합회(약칭 전경련)가 의무 고용제 폐지 등 '70대 핵심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다시 표면화되었다. 이 발표 후 전장협은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전경련 회관 앞에서 대중 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벌였으며, 결국 전경련은 대표적인 장애인계 언론이었던 「장애인복지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 지어졌다.

2. 장애인 노점상들의 죽음과 그에 이어지는 투쟁들

- 최정환의 분신과 정권 퇴진 구호의 재등장

1995년 3월 8일 오전, 노점상에 필요한 스피커와 배터리를 서초구청 단속반에게 빼앗긴 최정환(당시 37세, 지체 장애 1급)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압수당한 물품을 찾으러 구청 당직실로 갔으나 심하게 모욕을 당하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온몸에 끼얹고 분신하였다. 최정환의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성장 협 전국노점상연합회(약칭 전노련), 전장협 등 세 개 단체의 제안으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최정환은 3월 21일 오전 끝내 숨을 거두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애인노점상 최정환 열사 빈민장 장례위원회'로 전환하고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권력의 원천 봉쇄로 시신이 연세대학교로 들어오지 못하자, 집결해 있던 2,000여명의 노점상, 장애인, 사회단체 회원과 학생들은 격렬한 거리 시위를 벌였다.

최정환 열사의 분신과 이어진 투쟁은 사회주의의 봉괴와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가속화되던 민중운동진영의 위축, 그리 소위 '시민운동'의 대리주의적 운동방식의 일방적인 강화를 어느 정도 늦추는 역할을 하였다. 1995년 3월 24일과 25일 연세대학교 주변에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화염병과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는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 공권력에 의한 이덕인의 사망과 민중 운동 진영의 공동 행동

6급 지체 장애인인 이덕인(남, 당시 29세)은 전노련과 전장협이 함께 결성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의 회원으로 1995년 6월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도의 유원지에서 노점을 시작하였다.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자연 경관 훼손을 이유로 아암도의 노점을 불허해 오다가 11월 24일 오전 공권력과 용역 회사 직원 1,500여 명을 동원해 노점상 철거에 들어갔다. 이덕인은 30여명의 노점상들과 망루에 올라가 이에 저항하며 농성을 벌였는데, 상황을 알리고자 망루에서 내려 온 후 실종되었다가 11월 28일 오전 아암도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흔적이 뚜렷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탈취하여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로 부검까지 실시하자, 분노한 민중 운동권 전체의 연대 투쟁이 일어났다. 전장협 등 장애인 단체들과 민중 운동 진영은 '장애인노점상 고 이덕인열사 사인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빈민생존권쟁취를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약칭 이덕인열사비대위)'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덕인 열사의 죽음과 그에 이어진 투쟁은 최정환 열사 사건과 함께 영세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덕인열사비대위에 참가한 단체들의 제안으로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어 이후 민중 운동 세력의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3. 에바다복지회 비리 재단 퇴진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 '족벌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시설 비리의 전형, 에바다복지회

에바다복지회의 비리는 1996년 11월 26일에 에바다학교의 학생들과 농아원의 원생들이 '김영삼 대통령 할아버지께'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발송하고, 다음날부터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얼마 안 있어 농아원 원장, 에바다학교 서무과장, 에바다복지관 관장을 겸임하던 최실자가 구속되면서

에바다복지회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이것은 '에바다 투쟁'의 시작이었다. 에바다복지회는 최성창 목사와 그의 누나인 최실자를 중심으로 거대한 족벌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동생 최성호 역시 이사로 참여하였고, 최성호의 부인인 양봉애와 세 명의 동생들, 그리고 최실자의 양자들이 모든 요직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령 직원 등록과 주민등록증 이중 발급 등을 통한 수억 원의 국고 및 후원금 횡령, 작업장에서의 강제 노역과 임금 착취, 입양 사업을 명목으로 한 해외로의 인신 매매, 세 명의 장애 아동 의문사 등 에바다복지회는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준, 시설 비리의 전형이었다.

- 사회 운동 진영의 전국적인 연대를 통한 에바다복지회 비리 재단의 퇴진

에바다복지회의 비리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 지역의 노동 단체와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에바다비리 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에바다공대위)'가 구성되었다. 이어서 1997년 3월에 서울에서 '장애인인권확보 및 비리재단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리면서 에바다복지회의 비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1997년 여름에는 농성 참여를 이유로 재단에 의해 해임된 교사들과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농아 학생들이 '해아래집'이라는 이름의 생활 공동체를 꾸렸으며, 전국의 장애 관련 동아리와 관련 학과 학생회들이 모여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또한 에바다 투쟁 1,000일을 한 달여 앞둔 7월 중순에는 전국의 사회 운동 단체들이 집결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약칭 에바다연대회의)가 발족하여 이후 투쟁을 이끌어 갔다.

이러한 사회운동 진영의 전국적인 연대와 투쟁에 힘입어 에바다복지회는 결국 2003년 5월 28일의 진입투쟁 성공과 10여 일에 걸친 대치 과정을 겪더니면서, 2003년 6월 7일에 최씨 일가를 비롯한 구 비리 재단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에바다복지회를 민주화시키는데 성공하게 된다.

- 에바다 투쟁이 보여 준 특징과 의미들

'에바다 투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특징적이고 의미 있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에바다 투쟁은 시설 비리 투쟁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7년 동안의 투쟁을 시설 내의 주체들이 지켜냄으로써 승리를 일구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이 투쟁은 장애 문제에 지역 사회의 사회 운동 단체들은 물론 전국의 학생 단체와 노동 운동 단체 등이 실질적인 공동의 책임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에바다 투쟁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까지 장애인 운동에서 거의 유일한 현장 투쟁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4. 전문 영역을 맡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 여성 운동 단체의 등장

1990년대 중반기까지의 장애인 단체는 장애 유형이나 세대에 따라 혹은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이 되면 하나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장애인단체들이 생겨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1996년 12월 창립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를 들 수 있으며, 1997년 말의 'IMF 사태' 이후에는 장애인실업자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의 실업문제를 고민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한편 1998년 2월에는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장애 여성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여성 공감'

(약칭 공감)이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장애 여성들의 전국적 연합 조직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건설되면서,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정책 사업과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장대협과 장총련, 그리고 한국장총

'장애인복지기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장애인복지공대위)' 1995년 3월 18일에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약칭 장대협)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시적인 연대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장대협이 설립된 다음해인 1996년 9월 11일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등 네 개의 장애 유형별 단체들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약칭 장총련)를 설립하였다.

장총련은 장대협의 경우 장애인 단체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단체라며 장애인계의 대표성을 자임했고, 장대협은 장총련이 운동성을 상실한 이익 단체에 머물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장대협과 장총련은 일정한 견제와 갈등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정치권의 힘을 배경으로 장대협이 장총련을 와해시키면서 1998년 12월 3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약칭 한국장총)이 출범함으로써, 장총련이 재등장한 2002년까지 제도권 내 장애인계는 한국장총의 독주체제가 이어지게 된다.

6. 기성 정치 세력과 연계된 시민운동 세력의 강화와 전장협의 해소

앞서 언급되었듯이 전장협이 활동을 시작한 1993년 이후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전체 변혁 운동의 이념적 혼란과 위축이 가속화되는 한편,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운동의 변화를 주장하여 등장한 '시민 운동'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주류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 운동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전장협은 전국적인 지부와 다양한 회원 모임을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에 장애인 운동의 대중 투쟁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변혁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했던 전장협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거나 시민 운동 경험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진보적 장애인 운동 세력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전국적인 지부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사단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던 전장협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중 사업이 정체되고 독자적 활동이 어려워지자 1998년부터 전장협 내부에서는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의 한국 지부인 한국DPI와의 통합이 논의되었고, 내부에서는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도부의 다수는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겼다. 결국 1998년 10월 17일에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한국DPI로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전장협이 한국DPI로의 흡수 통합을 결정할 때의 상황은 장청이 전장협과 통합을 결정했던 상황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활동가들의 이탈과 대중적 지지 기반의 축소, 대중 투쟁을 불러일으킬 의제 형성의 어려움, 열악했던 재정 상황 등이 그렇다. 하지만 5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던 두 통합은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장청에게 전장협과의 통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더 많은 대중과 만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반해 전장협이 한국DPI로 통합되는 과정은 노선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 변혁적 관점과 대중 투쟁이라는 경로를 수정

하여, 제도권 정치 세력 내에 장애인의 지분을 형성함으로써 장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길을 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장 대중 투쟁이 거의 없었던 2000년까지의 시기보다는 새로운 진보적 현장 세력이 복원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IV. 현장 대중 투쟁의 복원과 새로운 전망의 제시(2001년 이후)

1. 중증장애인 주체들의 전면적 등장

2001년 이후 한국 장애인 운동이 보여 주었던 가장 큰 특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약화되다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의 소멸로 단절되다시피 했던 현장 대중 투쟁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원이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데에는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는다. 전장협의 마지막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들야학이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비타협적인 현장 투쟁을 통해 장애인 운동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소수이기는 해도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장애인 당사자 조직들이 이동권 투쟁을 통해 일상적인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투쟁의 경험과 의식은 이후 진행된 다양한 투쟁에서도 귀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게다가 이동권 투쟁의 핵심 주체들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와는 달리 훨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이후 장애인운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에 참여하면서 장애인 운동 전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2.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과 부모 운동의 등장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과 투쟁은 그동안 학계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정책'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 당사자, 특수교사, 장애 아동의 부모라는 교육 3주체가 함께 모여, 대중 투쟁의 공간에서 장애인 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 투쟁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었고 실질적인 대중력을 제공했던 것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었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들을 등장시켰다면,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라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를 등장시켰고 '부모 운동'을 개척해 나갔다. 한편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 중 다수는 정신 지체나 자폐 등 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이었기 때문에,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은 기존의 장애인 현장 투쟁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정신적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공동대책위원회나 연대 단체가 서울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의 10여개 지역에 조직을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적 운동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3. '420투쟁'을 통한 세 차원에서의 연대의 실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 이후 장애인 운동은 다양한 사안별 공동대책위원회나 권리 영역별 연대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안이나 영역에 따라 다양한 공대위와 연대 조직이 구성된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장애인 운동의 확장을 보여 주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같은 시기에 너무 많은 연대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각개약진을 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420공동기획단(현 420공동투쟁단)의 활동은 이러한 사안별?영역별 공동 행동 간의 연대, 각 지역별 장애인 운동 간의 전국적 연대, 장애인 운동과 전체 사회 운동과의 연대라는 세 차원에서의 연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420공동투쟁단의 경험은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의 건설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건설의 역사적 의의

전장연(준)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치열한 현장 활동이 낳은 조직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장연의 건설이 한국 장애인 운동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는 매우 크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의 소멸로 맥이 끊어진 진보적 현장 투쟁 조직의 복원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장애인 운동은 1980년대 후반에 사회 변혁 운동의 기운이 전반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청년 모임이 결성되면서 그 씨앗을 뿌리게 된다. 1986년 9월에 창립된 울림터는 장애인 운동을 제도 내의 문제를 넘어 사회 변혁 운동의 하나로 사고하기 시작한 최초의 조직이라고 평가되며, 이러한 흐름은 이후 장청과 전장협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전장협이 1998년 말에 한국DPI로 통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운동의 대중 투쟁,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의 장애인 운동을 이끌 구심을 상실하게 되었다. 전장연 건설 운동이 준비위원회 단계까지 이른 것은 그러한 구심을 새롭게 형성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는 장애인 단체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속에서 이루어진 독자적인 대안 세력의 구축이다. 2002년 이후 한국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라는 거대 사단 법인 조직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정책운동을 표방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장총과 다른 강조하며 장총련이 당사자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있지만, 양쪽 모두 정부로부터 장애인계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정책 결정 파트너가 되고 예산 지원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뭉치지 않는다면 장애인 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장연(준)은 이러한 대안 세력의 가시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는 서울에 편중되어 왔던 현장 투쟁의 전국화이다. 전장연(준)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국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치열한 투쟁은 이후에 자발적인 지역 모임을 구성하도록 추동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며, 420공동투쟁단의 활동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전국적 확대는 지역별 연대 조직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전장연은 이러한 흐름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며, 한국 사회 전역의 장애인 대중이 함께 소통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굳건한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야학 운동의 기본적 정체성과 방향

- 장애인야학 운동, '야 - 합' 할 수 있는 운동이 되자! -

김 도 현 (노들장애인야학 운영위원)

1. 장애인야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장애인야학을 넘어선 장애인야학 '운동'을 향한 고민들

장애인야학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한다는 것,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지는 않은 일인 듯싶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야학은 약 25개 내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인야학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주체들에게, 그 곳을 거쳐 간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교사들에게, 그 곳은 저마다의 이유로 소중하며 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공간일 터이다. 국가가 권리를 넘어 의무로까지 지정한 초중등 교육에서조차 배제된 장애인 대중의 삶(교과서에 나오는 국민의 4대 의무는 그 알량한 국방과 납세, 그리고 교육과 노동이 아니었던가),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해 배워야 하는 절박함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 삶에 함께하고자 하는 연대성, 그 치열함과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분명 장애인야학은 그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소중한 공간일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야학들은 그 운영의 주체, 설립의 배경과 목적, 그 물적 토대와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천차만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장애인야학 간의 본격적인 연대와 소통이 2004년에 들어서야 이루어졌음에서 나타나듯이, 그 공통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도 전국야학연석회의(1997년 구성)나 전국야학협의회(전야협, 2000년 출범)라는 공간을 통해 간헐적으로 조우했던 경험은 있겠지만 말이다.

장애인야학들 간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공통의 실천을 가져나가기 위한 역사가 짧았던 만큼,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야학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일뿐더러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듦다. 오히려 질문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 아니라, '이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라는 틀을 통해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 되어야 할 듯하다.

초반부터 딱딱하게 얘기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경험을 우회하여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자. 2008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함께, 노들장애인야학은 둥지를 틀고 있던 정립회관에서 퇴거를 당한 후, '길거리에 나앉아도 수업은 계속 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야학을 진행하였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정민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전국장애인야학 현황(2008. 4. 현재)]

지역	야학	대표	설립년도	설립주체	단체인허가	학생 수	교사 수
서울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	1993	민간단체 (장애인운동청년연합)	비영리민간단체	37	17
	너른마당		2006	민간단체	-		
인천	작은자야학	김도진 (교장)	1987	사회복지법인 (성린재활원)	비영리민간단체	25	33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교장)	2007	개인	-	20	6
부산	장애인참배움터	정선옥 (교장)	1989	민간단체 (부산장애인선교회)	비영리민간단체	16	16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학	오용균 (교장)	2001	사단법인(모두사랑)	사단법인 부설비 영리민간단체	52	35
	장애인배움터한울야학	조성배 (교장)	2007	대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비영리민간단체	2	4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박명애 (대표)	2000	민간단체 (장애인지역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20	12
광주	꿈을나누는사람들	김용목 (대표)	1996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	[사단법인 부설]	39	44
	디딤돌	김동호 (대표) (준비중)	2008	민간단체(한마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울산	동그라미장애인학교	성현정 (소장)	2005	민간단체(울산장애인자 립생활센터)	[센터(비영리민간단체) 부설]	7	10
경기	새움장애인야간학교	신승우 (교장)	2007	민간단체	-	3	3
충북	다사리장애인야학	유경희 (교장)	2004	민간단체(청년인권연대)	비영리민간단체	28	13
	제천장애인학교	정희교 (교장)	2005	-	비영리민간단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6	7
충남	천안한빛장애인야학	박성호 (교장)	2005	사단법인(한빛회)	[사단법인 부설]	12	12
	새누장애인야학	강현석 (소장)	2005	민간단체(중증장애인자 립생활지원센터)	[센터(비영리민간 단체) 부설]	15	7
전북	등불야학교	유영희 (교장)	2006	민간단체(전북여성장애인 연대)	[사단법인 부설]	-	-
	다온학교	김미아 (교장)	2007	개인	-	15	10
경남	진달래야학	김정일	2008	창원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사단법인 부설]	10	4
제주	제주장애인야학	고관철 (소장)	2004	민간단체(제주장애인자 립생활센터)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50	23
합계							317 233

정을 신설, 3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노들장애인야간학교가 임대해 있던 정립회관 측에서 2007년도 말일 자로 퇴거조치를 함께 따라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서울정민학교에 야간부로 초등, 중등, 고등 1학급씩 신설해 노들야학 학생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노들장애인야학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비좁은 교실에서 시원치 않은 교재로 자격도 없는 자원활동 교사들에 의해 교육을 받지 않고, 번듯한 공간에도 안정적으로 성인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기쁜 일이라 환영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박 교장은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받게 됐지만, 대부분 30, 40대를 훌쩍 넘긴 경우가 많은 성인들이 과연 초중고 정규과정 기간을 모두 거쳐야 할지는 현실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들야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편성을 했다지만, 노들야학은 야간 수업 외에도 자립생활교육, 컴퓨터 교실, 연극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주간에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들야학과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사실상 노들야학을 해체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함께걸음, 2008년 1월 18일)

결국 학령기를 지난 성인들이 정규과정을 모두 밟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장애인야학은 단순한 교육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존재의 이유를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그 자체로 타당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것만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근거의 전부였을까? 조금 더 문제의식을 밀고 나가 장애인 대부분이 학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장애성인에 대한 공적 교육시스템이 완비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통합된 환경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장애인야학은 그냥 사라져도 되는 공간인 것일까?

사실, 장애인야학이 학령기 교육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의 교육기회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의 질문에 대해 ‘No’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간 단순화의 위험성을 무릅쓰다면, 우리는 단순히 장애인 야간 학교를 운영하며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 야학 ‘운동’을 하고자하는 문제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권 교육이 학령기 장애인과 장애성인의 교육기회를 완벽히 보장할 수 있더라도,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와 실천의 내용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 야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미와 따뜻한 정의 수준은 넘어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라는 틀을 통해 고민하고자하는 핵심도 이것과 연동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야학 운동의 정체성은, 그리고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

2. 비판과 저항정신의 담지체로서의 장애인야학

: 세상에 대하 ‘야!’ 라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2000년 여름에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들야학과의 인연은 이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말, 평택 에바다복지회의 끔찍한 인권 유린과 시설

비리가 농아원생들의 농성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에바다투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의 시설비리 문제는 농아원장이 구속되었을 뿐 최씨 일가로 이루어진 족벌 비리 재단이 온존한 ‘미해결’의 상태에서, 초기 투쟁을 책임지던 연대의 틀은 해체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몇몇 장애인 인권 동아리들이 초동 단위가 되어 1997년 여름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가 만들어졌고, 1999년에는 전국의 인권?시민?노동단체를 아우르는 ‘에바다정상화를 위한연대회의’가 출범하였다. 이후 투쟁은 2003년까지 7년여 간 이어지며, 결국 구 비리재단의 완전한 퇴진을 이루어내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규모를 갖는 대다수의 장애인 단체들이 보수화되고 관변화되어 있던 현실에서, 더구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로 대표되던 장애인운동의 현장 대중투쟁 조직이 붕괴된 상황에서, 당시 지속적으로 에바다투쟁에 결합했던 장애인 단체로는 노들장애인야학이 유일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그곳은 학생단체와 인권?시민?노동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에바다투쟁에 있어 (에바다농아원의 교사와 학생들이라는 주체를 제외한다면) 투쟁을 끝까지 책임졌던 ‘유일한’ 장애인운동 단체였던 것이다.

에바다투쟁의 과정에서 노들장애인야학을 알게 되고, 이후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필자는 노들야학을 사회운동을 첫 공간으로 삼게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학생운동에 얼마간 지쳐있던 시점에서 조금은 소박하게 운동의 고민을 이어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초에 발생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 역에서의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장애인운동은 이동권 투쟁이라는 대중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의 흐름을 일구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개척해 나갔던 중심에 역시 노들장애인야학이 있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들장애인야학의 특이성을 과장하거나 잘났다고 자랑을 하기 위함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필자에게 각인되어 있던 (노들) 장애인야학의 첫 인상과 정체성은, 다른 어떠한 장애인 단체나 공간보다도 장애인 대중의 일상적 삶과 밀착되고, 또 당당히 세상을 향해 ‘야~!’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장애인대중의 현실에 기반한 비판과 저항정신. 나는 이것이 장애인야학이 장애인야학 ‘운동’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언제나 견지되어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빌현의 형태는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을지도 말이다.

3. 장애인운동의 대중적 거점으로서의 장애인야학

: 장애인의 단 ‘합’ 된 힘을 모아내는 대중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운동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인종 등) 다른 대중운동에 비해 가장 뒤늦게 시작된 사회 대중운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장애인 대중운동도 1960년대 말에 가서야 그 태동을 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1980년대 중후반을 대중적인 장애인운동이 시작된 시점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더 심각한 차별과 억압을 경험해온 집단인 장애인의 대중적 저항은 왜 그렇게 뒤늦게 시작되었을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답은, 그러한 장애인 대중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재했다는 점일 것이다.

많은 장애인 대중이 시설과 골방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되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운동이 지녀왔던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는 대중을 만나고 조직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한정적이었다는데 있었다. 많은 장애인운동의 1세대들이 서로의 관계성을 재활원이나 복지관 등 ‘○○시설’ 출신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한 단면을 드러내준다. 가장 일상적으로 운동이 조직되어왔던 공간인 일터

(공장과 회사)나 학교(대학)와 같은 사회 활동의 공간에 장애인들은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설사 소수의 장애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경우를 제외한다면)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 다양한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 개인은, 그러한 경쟁의 공간 내에서 '살아남는 일' 자체에 거의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저항의 주체로 나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많은 회원을 지니고 있는 유형별 법인 단체들이 대부분 보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러한 대중 단위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있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현재,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운동의 중요한 대중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애인야학일 수 있다.

우선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적 욕구는 여전히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정규 교육을 넘어서는, '평생 교육'의 개념과 실행이 자연스럽게 일반화되어 있다. 즉 점차적으로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야학은 또 다른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야학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갖기 어려운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일자리적인 맥락으로 대중들과 접하게 된다. 즉 장애인대중들에게 센터는 일정한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고,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대면 접촉의 시간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야학은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장애인 주체의 생활 전반을 함께 공유하게 되며, 그만큼 유대관계와 공동체성을 만들어가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야학은 당연히 교육사업의 진행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내에 장애인 주체의 의식화를 위한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배치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장애인야학은 장애운동의 대중적 힘을 모아내는 대중적 진지로서 그 전망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고, 또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4. 제도권 교육을 넘어선, 장애인 대안교육 공동체로서의 장애인야학

제도권의 자원을 '야(野)-합' 해 낼 수 있는 자기중심성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대중의 삶에 기반한 비판 및 저항정신의 담지체이자 장애인 대중운동의 진지로서 장애인야학을 사고할 때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는, 국가권력 또는 제도권과의 관계맺음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과 더불어 장애인야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국가적 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안정화와 포섭이라는 문제에 대해 일정한 고민을 해왔기 때문이다. 일단, 근대사회의 교육권이라는 것이 갖는 이중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하나의 권리가 된 것은, 단순히 이전 사회에 비해 보편적인 인권 관념이 높아지고 이것이 각 생활영역 속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사회학자들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흔히 군대, 경찰과 같은 '억압적 국가 기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ISA: ideological state apparatus)'라고 부른다.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질서에 순응하는 '건전한' 인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종교가 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종교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교육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육은 근대사회에서, '공' 교육으로 그리고 '의무' 교육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를 넘어 의무로까지 존재하는 교육에 대해 우리 사회는 공적인 지원을 회피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기존 억압적 질서의 내재화라는 대가를 강요하고자 한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다. 장애인야학이 존립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정한 국가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아니 오히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가 용이한 영역이 교육이라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야학이 서 있는 위치와 그 중심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나는 야학이 '밤에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에서의 야학(夜學)이 아니라, 풀뿌리 민중이 서있는 '들판에 존재하는 학교'라는 의미에서의 야학(野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적 자원의 활용과 함께 우리가 저들의 영토로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인 들판으로, 우리의 지향과 목적에 그려한 자원을 합치시켜내야 한다. 즉, '야(野)-합' 시켜 내야 한다. 저들의 자원으로 우리의 영토와 내용을 살찌울 수 있는 자기중심성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의 내용을 살찌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장애인야학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과정'으로서의 교육이 단순히 제도권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안교육적?대안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울로 프레이라이(P. Freire)가 『페다고지: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Pedagogy of the Oppressed)』에서 이야기했듯이, 교육은 (장애)민중의 해방을 위해 (장애)민중 스스로 만들어가는 무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추천사 성격을 갖는 서문에서 리차드 쇼울(Richard Shauell)이 지적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서둘한 긴장감을 갖고 스스로의 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중립을 지키는' 교육과정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새로운 세대를 현 제도의 논리 속에 흡수하여 거기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도구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의 실천' 즉 남녀 인간들이 현실에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해서 자기 세계를 변혁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수단이 되거나, 이 둘 가운데 하나(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위의 지적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느껴지는가?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삶과 정치의 문제로부터 분리된 '순수 문학' (즉, 종립적 문학)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순수문학이라는 범주의 발명과 옹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음을 상기한다면, 교육의 실천 역시 마찬가지임을, 아니 오히려 더 첨예한 정치의 영역임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교육적 실천은 '이 둘 가운데 하나' 중 어디에 더 가까웠던 것인가의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운동이 기본적으로 현재적 모순의 '파괴' 와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구성' 해내는 과정이라면, 장애인야학 내에서 교육적 관계맺음을 넘어선 일상적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관계 역시, 현재적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끊임없는 재구성의 과정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5. 장애인 대중운동의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 장애인 야학이 서 있는 위치, 그 관계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장애인야학이 빌 딩고 서 있는 현실과 주변의 '관계'에 눈을 돌려야 한다. 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신의 존재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실천의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한 기본은 '관계성'의 자각이다. 장애인야학은 '장애인 대중의 삶'과 '장애인 운동'이라는 관계성 내에 자신을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장애인야학이 홀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중의 삶?장애인 야학?장애인 운동이라는 관계성 내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계적 경험과 인식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노들을 팔아먹자면, 노들야학의 모토는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이다. 무엇을 위한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될 것인가? 위의 관계성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장애인 대중의 삶이며, 장애인 대중운동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장애인야학을 넘어선 장애인 대중운동 조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음을 이루어야 하며, 대안교육적 가치를 고민하며 실행하고 있는 단위들과도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만약 노들장애인야학이 2001년부터 진행된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복원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립된 존재로서 노들야학의 특이성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전혀 아니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와 전장협이라는 대중적 현장투쟁 조직과의 역사적 관계맺음이 있었기에, 그 관계맺음의 역사성이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옮겨놓은 노들야학 교칙의 전문은 이러한 고민과 지향을 다소간 추상적인 형태나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가 만들어 내는 모든 질곡과 억압을 철폐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장애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들장애인야간학교(이하 '노들장애인야학')를 개교하였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장애인 주체가 시혜와 동정의 껍질을 깨고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며, 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속에서 박탈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주체의 창조적 역량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교육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진정한 장애해방의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대중 운동은 현재 다시 한 번의 전환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지난 7여 년간 한국 사회의 장애인운동은 미국이나 일본의 장애인운동이 2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만들어 놓은 성과를 압축적으로 밟아왔다. 이제 조만간 우리의 운동 역시 투쟁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는, 그래서 대중적 결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중의 실리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모른다.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고자하는 장애인야학운동이 더더욱 자신을 벼르고 다잡아야 할 때인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식상한 얘기를,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딱딱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얘기를, 또 조금은 재미없게 풀어놓은 것 같다. 더 많은 고민과 치열함을 가지고 더 많은 땀과 시간을 장애인야학에 투여해왔던 다른 분들의 토론문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격의 없는 대화 속에서 의미 있는 방향다지기가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노동장애의학